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3.(화)

중장기 의무지출 추계는 추계 전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 정부가 복지분야 지출을 과소 추계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03.(화) 서울경제는 「의무복지지출 전망 격차 52조 '사상 최대'」 기사에서,

○ "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예상한 복지 지출 규모가 국회 예산정책처 자체 전망치와 비교해 사상 최대 수준*으로 벌어"졌다고 하면서,

* '26~'30년 복지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: (정부) **6.9%** vs. (예정처) **8.2%**
5년간 누적 전망 차이: 국민연금 21조원, 고보 9.6조원, 기초연금 6.4조원 등 총 **51.9조원**

○ "정부가 반도체 세수 호황에 기대 2030년 총지출을 1,000조원 대로 늘리면서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복지지출은 과소 추계"하였다고 보도하였다.

< 정부입장 >

□ 정부의 복지 의무지출 중장기 전망은 ❶**법령상 급여기준**, ❷**수급자 추이** 및 **향후 수급자 전망**, ❸**제도 변경 사항**, ❹물가 등 **거시경제 전망** 등을 **종합하여 추계**한 사항으로, 정부가 임의로 과소 추계한 것이 아닙니다.

○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재정전망은 ❶**자체 거시경제 전망**, ❷**자체 인구변수**, ❸주요 의무지출 제도 개편의 **재정 영향 시나리오** 등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방법으로 추계한 것으로, 양 기관 중장기 전망의 차이는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.

○ 특히, 2027년 예산안 및 2026~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시에는 예년에 비해 기초연금, 아동(기본)수당, 고용보험기금 등에 **많은 복지제도 개편사항**이 존재하여 양 기관간 **향후 제도 변화 시나리오 전망**에 따라 **큰 재정소요 차이**가 발생할 수 있으며,

○ 복지 **의무지출 규모 자체**가 커지면서 **양 기관 간 격차가 확대**된 측면도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복지 의무지출이 **법정지출**인만큼 매년 **차질없이 집행**될 수 있도록 **추계의 정확성 제고**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국민복지예산과	책임자	과 장	진민규 (044-214-2910)
		담당자	사무관	이상희 (leet88@korea.kr)
	연금보건예산과	책임자	과 장	이중진 (044-214-2930)
		담당자	사무관	강준이 (kennalo@korea.kr)
	고용노동예산과	책임자	과 장	정원 (044-214-253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성택 (lst0215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